

주간 통일정세

2017-32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8.5	北 외무상, ARF참석차 내일 새벽 마닐라 도착...제재반대 외교전(연합뉴스)
	8.7	北, 美의 이란 제재 부각...“중착점은 핵 합의 파기”(연합뉴스)
		北 ‘정부성명’ 발표...“안보리결의 전면배격...천백배 결산”(연합뉴스)
	8.8	北, 유엔 결의에 “국력 총동원 물리적 행사 취해질 것”(연합뉴스)
	8.9	北 ARF대표단 “의장성명, 한반도 긴장격화 본질 왜곡”(연합뉴스) 北, 유엔 새 대북제재에 내부결속 강화(연합뉴스)
8.10	北, 위기 부추기며 결속 강조...평양서 ‘10만 군중대회’(연합뉴스) “국가보위상 해임 北 김원홍,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취임”(연합뉴스)	
군사	8.8	“동해서 대함순항미사일 탑재 北 초계정 포착...3년만에 처음”(연합뉴스)
	8.9	北 전략군 “화성-12로 궤 포위사격 작전방안 검토”(연합뉴스)
	8.10	北 “화성-12 4발 사격방안 검토...궤 주변 30~40km해상 탄착될 것”(연합뉴스)
경제	8.10	쿠웨이트 “北 노동자에 취업비자 계속 발급...추방계획 없어”(연합뉴스)
	8.11	“북미 상반기 교역, 작년의 13%...2~6월엔 ‘0’”(연합뉴스)
사회 문화	8.7	北 “금강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 추진”(연합뉴스)
외교 국방	8.5	美 “대화 재개 이전에 여건 변해야...北 실험중단 출발점”(연합뉴스)
		이란 의회의장, 北 김영남에 “핵은 모두에 손해” 강조(연합뉴스)
		뉴질랜드, 북한 학자들에 입국 비자 거부(연합뉴스)
		아세안 10개국, 北 미사일·핵에 우려 표명...“유엔결의 지켜라”(연합뉴스)
	8.6	파키스탄, 대북 추가제재 동참...미국 독자제재방안 수용(연합뉴스)
		美 NSC 보좌관 “예방전쟁 포함한 모든 대북 옵션 검토”(연합뉴스)
		北 신문 “美, 제재하며 우리 건드리면 본토 불바다”(연합뉴스)
		北-中 마닐라서 외교장관회담...北 “양자관계·정세 논의”(연합뉴스)
		中왕이, 北리용호에 “더는 미사일 발사·핵실험 말라” 촉구(연합뉴스)
	8.7	김정은 포함 안돼...유엔 추가제재 北 기관 4곳·개인 9명(연합뉴스)
		美 국무, 北에 ‘조건부대화론’ 압박...“미사일시험 중단해야 대화”(연합뉴스)
		北 리용호 “美 적대시정책 청산 없이 핵·미사일 협상 없다”(연합뉴스)
		북-러 외무 회담...“모든 관련국 한반도 무력사용 피해야”(연합뉴스)
		北 리용호, 중국 이어 러·필리핀과 양자회담(연합뉴스)

	이란 대통령, 北 김영남 만나 “한반도 갈등 대화로 해결” 주문(연합뉴스)
8.9	ARF “北 ICBM 등 ‘심각한 우려’…안보리결의 즉각 지켜야”(연합뉴스)
8.10	백악관 관계자 “트럼프 ‘화염과 분노’ 발언은 즉흥적”(연합뉴스)
	美 국방 “北, 정권종말·국민과멸 이끌 어떤 행동도 중단해야”(연합뉴스)
	NBC “美, 트럼프 승인하면 B-1B폭격기로 北 미사일기지 선제타격”(연합뉴스)
	日, 北 꺾 포격예고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용인 못해”(연합뉴스)
	北, ‘화성-14’ 중거리미사일로 보는 러시아 비난(연합뉴스)
	EU, 北 도발 중단 촉구·평화적 방법 통한 한반도 비핵화 요구(연합뉴스)
	“미국, 北 ICBM 공격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연합뉴스)
8.11	프랑스 “북한 핵문제 중재 나설 준비 돼 있다”(연합뉴스)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놓고 “앞으로 알게 될 것”(연합뉴스)
	트럼프 “‘화염과 분노’ 경고 충분치 않아…北 정신 차려야”(연합뉴스)
	매티스 국방 “미국은 北 위협에 외교접근 선호…전쟁은 과멸적”(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8. 5.

■ 北 외무상, ARF참석차 내일 새벽 마닐라 도착…제재반대 외교전(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마닐라에서 7일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새벽 필리핀에 도착할 예정임.
- 북한의 지난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연쇄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리 외무상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 협의체인 ARF에서 신규 대북 제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보임.
- 마닐라의 북한 대표단 숙소에서 5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북한 외무성 당국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결정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과 공유하겠다”고 답했으며, 또 중국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결정되면 말해주겠다”고 말함.

2017. 8. 10.

■ “국가보위상 해임 北 김원홍,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취임”(연합뉴스)

- 올해 초 비밀경찰조직 수장인 국가보위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김원홍이 지난 5월 군 간부로 취임했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의 부국장으로 취임했다고 전했다.
- 김원홍은 지난 4월 북한군 군중 합동타격시위 등의 행사에 등장하며 건재를 과시했지만 새 직책은 알려지지 않았음.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8. 10.

■ 北, 위기 부추기며 결속 강조…평양서 ‘10만 군중대회’(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평양 시민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집회와 군중시위’가 열렸다면서 1면부터 4개 면을 할애해 관련 소식을 30여 장의 크고 작은 사진과 함께 게재함.
-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인 지난 7일 “안보리 결의 전면 배격, 미국에 천백 배 결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고 9일에는 이 성명을 지지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함.
- 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최고영도자 동지를 따르는 길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결사의 반미 대결전에 용감히 떨쳐나설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독려함.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8. 7.

■ 北, 美의 이란 제재 부각…“종착점은 핵 합의 파기”(연합뉴스)

- 북한은 7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이란의 반발 상황을 부각하며 양국 대립의 종착점은 핵 합의 파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격화되는 이란-미국 대립의 종착점’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제재와 이란 당국의 대응을 거론하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도수(강도)를 계속 높이면서 이란 핵 합의는 완전 파기의 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전함.
- 이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성실한 핵 합의 이행을 인정했고,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적당한 구실도 없다며 “할 수 없이 미국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인공지구위성 시험발사를 걸고(빌미로) 제재 도수를 높이면서 이란이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정부성명’ 발표…“안보리결의 전면배격…천백배 결산”(연합뉴스)

- 북한은 이날(7일)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 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의 공식 반응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가 채택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외무성 성명보다는 격이 높은 ‘정부’ 성명의 형식으로 발표되었음.
- 성명은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 배로 결산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걸어 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함.

2017. 8. 8.

■ 北, 유엔 결의에 “국력 총동원 물리적 행사 취해질 것”(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2371호 채택에 대응해 ‘국력을 총동원한 물리적 행사’를 취하겠다고 위협함.
- 아태평화위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북한을 반대하는 ‘특대형 테러범죄’라고 규정하면서 “강화된 종합적인 우리의 국력을 총동원하여 물리적 행사를 동반한 전략적인 조치들이 무섭게 취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성명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무참히 짓밟으려고 달려드는 날강도적 행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 조건에서 그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실제적인 정의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2017. 8. 9.

■ 北 ARF대표단 “의장성명, 한반도 긴장격화 본질 왜곡”(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은 8일 밤 발표된 ARF 의장성명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 긴장격화의 본질을 심히 왜곡하는 미국과 몇몇 추종국들의 주장이 반영됐다”고 주장함.
- 북한 ARF 대표단 관계자는 9일 아침 귀국을 위해 숙소인 마닐라 뉴월드호텔을 출발하면서 취재진에 배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성명’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의장성명을 비판함.
- 북측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것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하고 현실적인 핵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라며 “미국의 사측 하에, 한 유엔 성원국의 국방력 강화조치를 제멋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한 유엔안보리 결의들은 그 적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모략문서로서 우리는 언제 한번 인정한 적 없으며 전면 배격했다”고 주장함.

■ 北, 유엔 새 대북제재에 내부결속 강화(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의 초강경 대북제재 2371호에 맞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내부결속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사설에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잇단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비난하면서 “위대한 당이 가리키는 병진의 한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흔들림 없는) 신념”이라고 선전함.
- 그러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선군(先軍)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북한 정부성명을 접한 온 나라 천만 군민의 치솟는 적개심과 멸적의 보복 의지가 하늘에 닿고 있다”며 대중 선전전을 벌임.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8. 8.

■ “동해서 대함순항미사일 탑재 北 초계정 포착…3년만에 처음”(연합뉴스)

- 며칠 전 동해에서 대함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초계정의 움직임이 미 첩보위성에 포착됐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동해 퇴조동 함대사령부에서 ‘스톰페트럴’ 대함순항미사일 2기를 원산 유도미사일 초계정에 탑재한 것으로 알려짐.
- 미 정보당국 관계자는 대함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초계정이 동해에서 포착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폭스뉴스에 설명함.

2017. 8. 9.

■ 北 전략군 “화성-12’로 괌 포위사격 작전방안 검토”(연합뉴스)

-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인 전략군은 9일 미국을 향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함.
- 북한군 전략군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미제의 핵 전략폭격기들이 틀고 앉아있는 앤더슨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그러면서 “이 괌도 포위사격 방안은 충분히 검토·작성되어 곧 최고사령부에 보고하게 되며 우리 공화국 핵 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함.

2017. 8. 10.

■ 北 “화성-12 4발 사격방안 검토…괌 주변 30~40km해상 탄착될 것”(연합뉴스)

- 북한군 전략군은 9일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북한군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 김락겸은 이어 “우리가 발사하는 ‘화성-12’는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히로시마(廣島)현, 고치(高知)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천 356.7km를 1천 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8. 10.

- 쿠웨이트 “北 노동자에 취업비자 계속 발급·추방계획 없어”(연합뉴스)
 -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쿠웨이트 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취업비자를 계속 발급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밝힘.
 - 쿠웨이트 정부는 AP통신의 관련 질문에 “북한 노동자를 추방할 계획도 없으며 그동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함.
 - 이는 미 국무부가 6월 낸 보고서에서 “쿠웨이트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기술한 것과 다르며, 쿠웨이트 공보부는 AP통신에 현재 국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가 6천 64명이라고 확인함.

2017. 8. 11.

- “북미 상반기 교역, 작년의 13%…2~6월엔 ‘0’”(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의 올해 상반기 교역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에 불과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11일 보도함.
 - 미 상무부 산하 인구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미 교역액은 2천 66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나 감소했으며, 교역 내용은 전부 미국의 대북 수출로 나타남.
 -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물품은 지난 1월 수출한 2천660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미리 녹음된 CD, 테이프 등이 전부였으며, 결국 올해 2월 이후 5개월간 북한과 미국 간 교역액은 '0'인 셈임.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8. 7.

- 北 “금강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 추진”(연합뉴스)
 - 북한이 금강산을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됨.
 -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의 리충성 연구사는 이날 조선중앙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재 금강산 자연공원을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연구소에서는 최근 연간에만도 우리나라의 명산들을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했다”라며 이같이 전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8. 5.

■ **美 “대화 재개 이전에 여건 변해야·北 실험중단 출발점”(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면 여건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며 북한이 ‘출발점’으로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미국 국무부의 그레이스 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화에 열려 있지만, 대화가 재개될 여지가 있기에 앞서 여건(conditions)이 변화해야만 한다”고 말함.
- 최 대변인은 이어 “출발점으로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함.

2017. 8. 6.

■ **美 NSC 보좌관 “예방전쟁 포함한 모든 대북 옵션 검토”(연합뉴스)**

-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가능성을 질문 받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예방전쟁을 말하느냐”고 확인한 뒤,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함.
-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 즉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참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들을 가진다면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함.

■ **北 신문 “美, 제재하며 우리 건드리면 본토 불바다”(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 신문은 ‘미국은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제목의 기명 논평에서 “미국이 거덜이 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여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넣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멸뿐”이라며 이같이 위협함.
- 이 논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2371호 결의 채택 전에 작성된

것이지만 북한이 미국 주도로 이뤄진 더 강한 대북제재 결의에 더 강한 반발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2017. 8. 7.

■ **美 국무, 北에 ‘조건부대화론’ 압박…“미사일시험 중단해야 대화”(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 북한에 북미대화를 원하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최상의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외신이 전함.
- 그는 우선 “조건이 맞는다면 북한과 앉아 미래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는 말로, 대화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언제 대화가 가능한 것인지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얼마나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어 취재진이 구체적인 시점을 묻자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함.

■ **北 리용호 “美 적대시정책 청산 없이 핵·미사일 협상 없다”(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7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리 외무상은 이날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서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함.
- 리 외무상은 표지를 제외하고 A4용지 8페이지 분량인 연설문에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에서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자면 미국의 심장부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는 이 길에서 최종 관문을 넘어섰으며 미 본토 전역을 우리의 사정권 안에 넣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줬다”고 말함.

2017. 8. 10.

■ **백악관 관계자 “트럼프 ‘화염과 분노’ 발언은 즉흥적”(연합뉴스)**

- 북한이 위협을 지속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는 계산된 게 아니라 즉흥적 언급이었다고 한 백악관 고문이 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밝힘.

-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응한 뒤 과장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자 ‘톤다운’에 나선 모습임.
- 이에 대해 이 고문은 “백악관 내 다른 관리들도 사전에 대통령에 그 발언을 할지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단지 북한의 행동에 신물이 났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美 국방 “北, 정권종말·국민파멸 이끌 어떤 행동도 중단해야”(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어떤 행동도 고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은 자신을 스스로 고립하는 일을 멈추고 핵무기 추구를 그만두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그는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김정은은 북한이 세계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동의한 유엔 안보리의 통일된 목소리와 세계 각국 정부의 성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함.

■ **NBC “美, 트럼프 승인하면 B-1B폭격기로 北 미사일기지 선제타격”(연합뉴스)**

-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명령을 내리면 콰에 배치된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기를 동원, 수십 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짐.
- 미 NBC 방송은 복수의 고위 군 관계자와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과 태평양 공군 사령관을 지낸 테렌스 오쇼네이 중장 등 퇴역 장성들을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선제타격의 핵심은 B-1B ‘랜서’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모양이 백조와 흡사해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 편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기 시작한 5월 말 이후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타격을 상정, 모두 11차례의 연습 출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이 방송은 전함.

■ **“미국, 北 ICBM 공격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연합뉴스)**

- 미국은 핵탄두를 적재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에 맞서 국토를

- 방어할 준비와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새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그리브스 사령관은 이날 앨라배마주 헨즈빌에서 열린 우주·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미국이 배치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 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북한의 ICBM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함.
 - 공군 중장인 그는 이어 MDA가 여러 종류의 ICBM이나 가짜 탄두(decoy) 등 점증하는 위협을 완화하는 역량을 “부지런히” 확대하는 식으로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으며, “우리는 분석, 시스템 구축,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시험 등 다양한 관련 작업을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진행해왔고 결과 우리는 대응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설명함.

2017. 8. 11.

■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놓고 “앞으로 알게 될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 여부를 놓고 “무슨 일이 생길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언급함.

■ **트럼프 “화염과 분노” 경고 충분치 않아…北 정신 차려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는 자신의 경고에도 북한이 광 주변 타격을 위협하는 등 더욱 거세게 나오는 데 대해 “아마도 그 성명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함.
-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북한을 자극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여야의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그게 강한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답함.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

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맞서 자신이 언급한 ‘화염과 분노’ 경고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워싱턴 정가의 비판에 정면 반박하면서 ‘언어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임.

■ **매티스 국방 “미국은 北 위협에 외교접근 선호…전쟁은 파멸적”(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말함.
- 매티스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주(州)의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외교가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AF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함.
- 이어 “미국의 노력은 외교적으로 견인되고 있으며, 외교적 결과를 얻고 있다”며 “바로 지금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전쟁의 비극은 ‘파멸적’(catastrophic)일 것이라는 사실 이상의 다른 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군사적 충돌의 결과를 경고함.

나. 북·중 관계

2017. 8. 6.

■ **北·中 마닐라서 외교장관회담…北 “양자관계 정세 논의”(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6일 마닐라에서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함.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장인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시간 오후 1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양자 회담을 진행함.
- 북측 ARF 대표단 대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방광혁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회담 후 숙소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에게 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한 뒤 “두 나라 외무상(외교장관)들은 지역 정세와 쌍무(양자)관계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진행했다”고 말함.

■ **中왕이, 北리용호에 “더는 미사일 발사 핵실험 말라” 촉구(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에 “더이상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관영 인민망이 6일 보도함.

- 인민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고강도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날 왕 부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장인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개최했으며, 그 자리에서 관련 언급을 했다고 전함.
- 왕 부장은 양자회담후 취재진에 리 외무상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으며, 그는 “중국과 북한이 인접 국가로서 쌍방이 다자회의 장소에서 서로 접촉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에 “안보리가 발표한 대북제재 결의에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소망에 어긋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더이상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고 말함.

다. 북·일 관계

2017. 8. 10.

■ 日, 北 靑 포격예고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용인 못해”(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북한의靑 포위 사격 예고에 대해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에 관한 명백한 도발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강한 경고와 비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미·일은 방위체제와 능력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는 17일 열리는 미·일 외무·국방장관 협의회(2+2)를 활용해 계속해서 미·일동맹의 억제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라. 북·러 관계

2017. 8. 7.

■ 북·러 외무 회담…“모든 관련국 한반도 무력사용 피해야”(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7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모든 관련국의 무력사용 자제를 촉구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함.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장관과 리

- 외무상은 이날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함.
- 이와 관련,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양자 관계와 한반도 상황의 긴급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라브로프 장관이 한반도에서 무력사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할 것을 모든 관련국에 요구했다”고 전함.

2017. 8. 10.

■ **北, ‘화성-14’ 중거리미사일로 보는 러시아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과정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를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한 러시아에 대해 억지주장이라고 비난함.
- 북한 국제문제연구원의 리철호 연구사는 9일 ‘진짜 소경인가, 아니면 소경 흉내를 내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발사 성공을 누구보다도 인정하기 싫어할 대양 건너 미국도 감히 부정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 어떻게 되어 (북한의) 턱밑에 있는 러시아에만은 중거리탄도로켓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라며 이같이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리 연구사는 “문제는 러시아가 저들의 억지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국방성의 명목까지 동원하면서 요지부동의 막무가내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8. 5.

■ **이란 의회의장, 北 김영남에 “핵은 모두에 손해” 강조(연합뉴스)**

-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마즐리스) 의장이 테헤란을 찾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4일(현지시간) 오후 만나 “핵무기는 모두에게 손해”라면서 자국의 평화적 핵프로그램을 강조했다. 국영 IRNA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라리자니 의장은 “어느 나라도 세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세계 평화와 안보를 확립하는 일이 각 정부가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함.
-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북한과 이란은 공동의 적(미국)이 있다”면서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함.

■ 뉴질랜드, 북한 학자들에 입국 비자 거부(연합뉴스)

- 뉴질랜드가 이번 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려는 북한 학자들의 입국 비자를 거부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5일 보도함.
- 헤럴드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오클랜드 대학에서 열린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에 역사학자, 철학자, 언어학자 등 10명 규모의 북한 사회과학원 대표단이 참가하려 했으나 비자가 거부됐다고 이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주도 노력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그러나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들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안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이 신청한 비자를 지난달 28일 거부함.

■ 아세안 10개국, 北 미사일 핵에 우려 표명…“유엔결의 지켜라”(연합뉴스)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10개국 장관들은 “7월 4일과 28일 진행된 북한의 ICBM 실험과 2016년 있었던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데 거듭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힘.
- 이어 “이러한 전개는 해당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들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함.

■ 파키스탄, 대북 추가제재 동참…미국 독자제재방안 수용(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을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수준을 넘는 추가제재에 동참함.
- 5일 파키스탄 일간 더뉴스에 따르면 파키스탄 외교부 전략수출통제국은 지난 6월 미국 재무부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자국 기업이나 자국민과 거래도 금지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통상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통보함.

- 거래가 제한된 대상은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 등 북한인과 조선대령강무역회사와 송이무역회사 등 북한 기업, 이르디스-베어링스, 인디펜던트 펠트폴리엄 등 북한 미사일 부품 공급과 관련된 러시아 기업, 이고리 미추린 등 러시아인이 포함되었으며, 북한 최고 헌법기관인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음.

2017. 8. 6.

■ 김정은 포함 안돼...유엔 추가제재 北 기관 4곳·개인 9명(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블랙리스트'에는 4개 기관과 9명의 개인이 추가로 포함되었음.
- 유엔 안보리는 기존의 제재명단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기관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을 추가했다고 이날 밝힘.
- 제재 결의 추진 초기 미국 일부 언론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름도 제재 명단에 명기하길 미국이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김정은 이름은 포함되지 않음.

2017. 8. 7.

■ 北 리용호, 중국 이어 라·필리핀과 양자회담(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7일 러시아, 필리핀과 각각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북한 측 당국자가 밝힘.
- 방 부국장은 북한 대표단 숙소인 마닐라 뉴월드호텔 앞에서 기자들에게 "(리 외무상이) 러시아 외무상과 만나서 지역정세문제, 쌍무(양자)관계와 관련된 의견교환을 진행했다"고 전함.
- 리 외무상은 라브로프 장관에 이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알란 카예타노 외무장관과도 양자회담을 했으며, 방 부국장은 필리핀과의 회담에 대해 "지역정세 문제, 필리핀과의 쌍무관계 문제, 특히 아세안과의 관계 문제와 관련한 의견교환을 진행했다"고 소개함.

■ **이란 대통령, 北 김영남 만나 “한반도 갈등 대화로 해결” 주문(연합뉴스)**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한반도의 갈등과 불화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함.
- 이란 대통령실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남북한의 대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이룩하는 유일하고 실행가능한 수단”이라면서 “이란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지내길 바란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은 과거부터 좋은 관계를 맺었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존중받아야 하며 어느 형태의 내정 간섭도 옳지 않다”고 말함.

2017. 8. 9.

■ **ARF “北 ICBM 등 ‘심각한 우려’…안보리결의 즉각 지켜야”(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함.
- ARF 의장국인 필리핀은 7일 열린 ARF외교장관회의의 결과물로 8일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힘.
- 의장성명은 또 “장관들은 가장 최근인 7월 4일과 7월 28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그에 앞선 탄도 미사일 발사, 작년의 두 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힘.

2017. 8. 10.

■ **EU, 北 도발 중단 촉구·평화적 방법 통한 한반도 비핵화 요구(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관련국에겐 군사적 해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함.
-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캐서린 레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로 이어진 최근 북한 핵사태는 EU는 물론 전 세계의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함.
- 또 레이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달성돼야 한다”면서 군사적 행동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함.

■ 프랑스 “북한 핵문제 중재 나설 준비 돼 있다”(연합뉴스)

- 프랑스 정부가 북한 핵 문제의 중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는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에 관한) 평화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중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이 전함.
- 프랑스 정부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리비아 평화협상 중재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8.6	한미 외교장관회담...“안보리결의, 北자금줄 차단에 실효적”(연합뉴스)	
	8.7		트럼프 “文대통령과 방금 통화...유엔 대북결의 기쁘다”(연합뉴스)
		한미일 “제재 강화로 대화 단초 마련” 공감(연합뉴스)	
8.8		美국방부 “한국과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협의중...적극 고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8.6	왕이 “사드결정 양국관계에 찬물”...강경화 “소통으로 풀어야”(연합뉴스)	
	8.7		다시 사드 비난 강도 높이는 中 “사드라는 쓴약 삼키지 않을 것”(연합뉴스)
		韓中, 사드갈등 탓 수교 25주년 행사도 따로 개최 예정(연합뉴스)	
8.8	강경화 “中 사드입장은 본말전도...문제의 기본은 北도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8.7	文대통령, 아베 日총리와 통화...“北대화로 이끌 방안 협의해야”(연합뉴스)	
		한일 외교장관회담서 위안부 합의 입장차 재확인(연합뉴스)	

	8.8		日, 방위백서 13년째 “독도는 일본땅” 도발...韓 “즉각 철회하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8.7	강경화, 러 외무장관 환담...“안보리 제재, 이정표적 성취”(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8.6	트럼프, 대북제재 결의안 찬성한 중·러에 “감사”(연합뉴스)	
미중 관계		8.7		中왕이, 美틸러슨 압박...“제재만으로 북핵문제 해결못해”(연합뉴스)
		8.9	美, 中알루미늄에 보조금 이유로 관세폭탄...中업계 반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8.8	日오키나와 담당상 “미일 지위협정 재검토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8.6		러 외무 “美 군사준비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 용납못해”(연합뉴스)
미러 관계		8.7	얼어붙는 미·러 관계...러시아 美외교관 추방에 美도 맞대응(연합뉴스)	
		8.8		러 외무차관, “트럼프 정부, 오바마 정부보다 더 강경”(연합뉴스)
		8.10		러시아, 국방부·CIA·의사당 등 美 주요시설 항공정찰(연합뉴스)

	8.11		NHK "러, 쿠릴열도서 군사훈련...美 MD강화 견제"
분류	일자	중국	일본
	8.5		"日, 중국에 북한 노동자 입국 제한 수차례 요청"(연합뉴스)
	8.7	중일 외교장관 '남중국해 갈등'...中왕이, 日고노에 "실망했다" (연합뉴스)	
중일 관계	8.8		日 한중일 정상회의 이달 개최 제의...中 거부로 무산될 듯(연합뉴스)
		中왕이, 日고노 외무상에 "남중국해 시뻐트거리 만들지 마라"(연합뉴스)	
	8.9	중국방부 "일본의 '중국 위협론' 반대...엄중 교섭 제기"(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8.6	중국·러시아, 미국에 막혀 공동 우주개발 협력 추진(연합뉴스)	
중러 관계	8.7	중·러 외교수장 "한반도 긴장 예방이 가장 중요"...대화에 무게(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8. 6.

■ 한미 외교장관회담…“안보리결의, 北지금줄 차단에 실효적”(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양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직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환영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함.
- 힐러슨 장관은 ‘집행하다’(enforce)는 표현을 써가며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전함.
- 더불어 두 장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와 대북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비핵화 견인을 위한 양자, 다자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을 집중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힘.

2017. 8. 7.

■ 트럼프 “文대통령과 방금 통화…유엔 대북결의 기쁘다”(연합뉴스)

- 17일간 여름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일(현지시간) 오후 트위터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방금 통화를 끝냈다”면서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15-0으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기쁘고 인상 깊게 생각한다”는 글을 올림.
- 이어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힘.
- 백악관은 “두 정상은 북한이 한·미·일을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심각하고 점증하는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전함.

■ 한미일 “제재 강화로 대화 단초 마련” 공감(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힐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시간 7일 낮 1시 10분부터 약 46분간 미국 대표단 숙소인 마닐라 소피텔에서 강 장관의 주최로, 업무 오찬을 겸한

3자 회담을 진행함.

- 외교부는 회담 후에 낸 보도자료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신규 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모든 국제사회가 이를 충실히 이행토록 견인해 나가는데 있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또 “장관들은 지속적인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으로써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평화·안정은 물론 관련국들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소개함.

2017. 8. 8.

■ **미국방부 “한국과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협의중…적극 고려”(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성능 고도화에 맞서 한국군의 미사일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한 탄두 중량 확대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밝힘.
-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파괴 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제한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힘.
-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것(탄두 중량 확대)은 현재 여기서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사안”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방어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도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함.

나. 한·중 관계

2017. 8. 6.

■ **왕이 “사드결정 양국관계에 찬물”…강경화 “소통으로 풀어야”(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6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를 계기 삼아 개최한 양자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재확인함.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콘라드 호텔에서 약 1시간 동안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난달 북한의 2차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후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개선되는 양자(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다소 유감스럽다”고 밝힘.

-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에 의해서 위협이 상당히 고조된 것이 사실이고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며 “방어적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고, “양국관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어려움은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발언함.

2017. 8. 7.

■ **다시 사드 비난 강도 높이는 中 “사드라는 쓴약 삼키지 않을 것”(연합뉴스)**

- 청샤오허(成曉阿)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7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중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서 “중국은 사드라는 쓴 약을 삼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사평(社評)에서 “한국은 사실상 북핵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으며,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이라며, 한국의 정세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함.
- 신문은 “한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면, 미국을 돕느라 북한의 관심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스스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이 얕다”고 주장함.

■ **韓中, 사드갈등 탓 수교 25주년 행사도 따로 개최 예정(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가운데 24일 열리는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사가 따로 열리고, 행사 규모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7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사를 담당하는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는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별도로 기념행사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힘.
- 중국 정부는 5년 단위의 수교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관례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개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2017. 8. 8.

■ **강경화 “중 사드입장은 본말전도…문제의 기본은 北도발”(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등의 사드 관련 중국 측 주장은 “본말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함.
- 강 장관은 8일 마닐라 시내 한국 취재진 숙소에서 자신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과 그 계기에 진행한 양자회담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함.
- 강 장관은 지난 6일 진행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 대해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본말전도된 것이었다”며 “문제의 기본은 북한 도발에 있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도발에 대한 국익과 방어적 필요에 따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소개함.

다. 한·일 관계

2017. 8. 7.

■ **文대통령, 아베 日총리와 통화…“北대화로 이끌 방안 협의해야”(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일과 한·미·일은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발언함.
-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23분간 통화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협상을 통해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한·미·일 삼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발언함.
- 이에 아베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데 대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 **한일 외교장관회담서 위안부 합의 입장차 재확인(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나란히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7일 ARF 일정을 마친 뒤 회의장인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양자회담을 개최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회담에서 강 장관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합의 실시는 중요하다”고 밝힘.

-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고, 장관 직속의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취지 및 의미를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함.

2017. 8. 8.

■ 日, 방위백서 13년째 “독도는 일본땅” 도발..韓 “즉각 철회하라”(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함.
-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국방부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 쓰시마 고스케(對馬強介)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함.

라. 한·러 관계

2017. 8. 7.

■ 강경화, 러 외무장관 환담..“안보리 제재, 이정표적 성취”(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저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만찬 계기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북핵 문제 및 한·러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환담했다고 외교부가 7일 밝힘.
- 양 장관은 환담에서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활동 관련 자금원 차단 측면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담은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2371호 채택이 북핵 대응에 있어 이정표적 성취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강 장관은 특히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추가 도발 중단, 비핵화 의무 준수,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조속히 호응토록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8. 6.

■ 트럼프, 대북제재 결의안 찬성한 중·리에 “감사”(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의 뜻을 표함.
- 백악관은 이날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채택)을 위한 길을 터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함.
- 아울러 “대통령은 동맹국·협력국들과 공조해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적이고 불안운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2017. 8. 7.

■ 중왕이,美틸러슨 압박…“제재만으로 북핵문제 해결못해”(연합뉴스)

-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장소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과 만나 북한에 단순히 제재만 가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공정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단순히 제재만 가하는 것은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며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함.
- 왕 부장은 아울러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중국 기업에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함.

2017. 8. 9.

■ 美, 中알루미늄에 보조금 이유로 관세폭탄…중업계 반발(연합뉴스)

-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포일을 대상으로 상계관세(CVD)

조사를 벌여 예비 관세 16.56~80.97%를 매겼다고 밝힘.

- 상무부 월버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해로운 무역 관행을 이용해 미국의 필수 산업, 노동자, 비즈니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는 외국들의 시도에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힘.
- 중국비철금속산업협회의 원셴권 부회장은 “우리는 무역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중국 알루미늄 업계는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발언함.

나. 미·일 관계

2017. 8. 8.

■ 오키나와 담당상 “미일 지위협정 재검토해야”(연합뉴스)

- 에사키 데쓰마(江崎鐵磨·73) 오키나와·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문제 담당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호주에서 발생한 미군기 추락사고를 거론하며 “미일 지위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 에사키 담당상은 과거에 발생한 미군기 사고를 거론하며 “조종 실수나 기체가 좋지 않다거나 (원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다”면서 “지위협정에서 바뀌어야 할 점은 바꾸도록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시간이 걸려도 오키나와 주민의 마음을 정부가 확실히 받아들여 미국에 할 말은 하면서 (재검토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밝힘.

다. 미·러 관계

2017. 8. 6.

■ 러 외무 “美 군사준비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 용납못해”(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적 준비로 촉발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함.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텍스 킬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밝힘.
-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양측은 전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가 채택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상황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고 전함.

2017. 8. 7.

■ **일어붙는 미·러 관계…러시아 美외교관 추방에 美도 맞대응(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내 미국 외교공관 직원 755명을 추방하겠다고 나서자, 미국도 다시 대응 조치를 하기로 함.
-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미국 외교공관 직원 추방 계획과 관련, 러시아 정부에 이 같은 결정의 명확한 배경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을 시작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이 보도함.
- 미국은 다음 달 1일까지는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일단 계획을 잡은 상태이며, 러시아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그에 따라 대응책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아직 대응 방안의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당국자들은 설명함.

2017. 8. 8.

■ **러 외무차관, “트럼프 정부, 오바마 정부보다 더 강경”(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전임 오바마 정부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비판함.
- 8일 NHK에 따르면 대미정책 담당인 라브코프 차관은 러시아 국제관계 전문지 및 언론의 질문에 대답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미·러 관계 악화의 책임은 러시아의 대화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미국 측에 있다고 주장함.
- 라브코프 차관은 미국의 새로운 대 러시아 제재조치 발동에 대해 “오바마 전 정부가 남겨 놓은 가장 나쁜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함.

2017. 8. 10.

■ **러시아, 국방부·CIA·의사당 등 美 주요시설 항공정찰(연합뉴스)**

- 워싱턴 포스트(WP), CNN 방송, 폴리티코 등은 러시아 공군 소속 Tu-154 정찰기 한 대가 9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와 인근 메릴랜드 지역 등의 국방부, 의사당, 중앙정보국(CIA), 앤드루스 합동기지 등 주요 기관 상공을 저공으로 비무장 정찰비행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정찰기는 이날 3천700피트(1천127m)의 저공으로 워싱턴 도심과 메릴랜드 지역의 주요 기관 등을 정찰했으며, 이날 정찰비행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에 따른 합법적인 비행임.
- 미 의회경찰은 이날 “허가를 받은 저고도 항공기 한 대”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제한구역 상공을 비행할 것이라고 경고를 발령했으며, “기체가 큰 이 항공기가 의회 상공을 직접 비행할 가능성이 있고, 수도 경찰과 다른 연방기관들이 함께 비행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힘.

2017. 8. 11.

■ **NHK “러, 쿠릴열도서 군사훈련…美 MD강화 견제”(연합뉴스)**

- 러시아군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의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과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섬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짐.
- 일본 공영방송 NHK는 러시아군의 이번 훈련이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동북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배치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함.
- 보도에 따르면 극동 시베리아를 관할하는 러시아 국방부 동부군관구는 10일 쿠릴열도 훈련장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발표함.

라. 중·일 관계

2017. 8. 5.

■ **“日, 중국에 북한 노동자 입국 제한 수차례 요청”(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이후 중국 정부에 대해 북한 노동자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도록 외교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4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에 이뤄짐.
-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같은 달 26일 일본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당시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 노동자 입국 제한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규제도 요구함.
- 그러나 우다웨이 당시 특별대표와 양제츠 국무위원 모두 일본측의 이런 요청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2017. 8. 7.

■ **중일 외교장관 ‘남중국해 갈등’…중왕이, 日고노에 “실망했다”(연합뉴스)**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7일 첫 회담을 한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로 설전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왕 부장은 “이번 고노 외무상 취임에 많은 사람이 기대했지만, 회의에서 (남중국해에 관한) 당신의 발언에 솔직히 실망했다”고 발언함.
- NHK는 고노 외무상이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열린 다른 회의에서 중국이 거점을 구축하려는 남중국해 문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힘을 배경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모든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에 왕 부장이 반발한 것으로 관측함.

2017. 8. 8.

■ **日 한중일 정상회의 이달 개최 제의…中 거부로 무산될듯(연합뉴스)**

-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달에 개최하자고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8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독일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의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이달 개최를 타진했지만 중국측이 응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는 10월 이후에나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는 전망함.

■ **중왕이, 日고노 외무상에 “남중국해 시빗거리 만들지 마라”(연합뉴스)**

-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에게 남중국해와 관련해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함..
- 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중인 왕 부장이 전날 고노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발언함.
- 왕 부장은 고노 외무상에게 “남중국해 정세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점을

존중하고 이를 위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기울인 노력을 일본이 존중하라”고 주장했으며, “일본이 지역의 평화·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국가의 뒤에서 말썽을 피우거나 시빗거리를 조성하지 말라”고 발언함.

2017. 8. 9.

■ **중국방부 “일본의 ‘중국 위협론’ 반대…엄중 교섭 제기”(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가 ‘중국 위협론’을 제기한 일본의 2017년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비난함.
- 중국 국방부는 8일 밤늦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우첸(吳謙)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방위백서의 중국을 간섭하는 내용은 케케묵은 것으로 중국군을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국제사회를 공공연하게 속이고 있다”고 반박함.
- 우첸 대변인은 “중국군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일본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중국은 방위적인 국방 정책과 적극적인 방위 군사 전략이 확고하며 평화 유지와 인도주의에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대국 군대의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주장함.

마. 중·러 관계

2017. 8. 6.

■ **중국·러시아, 미국에 막혀 공동 우주개발 협력 추진(연합뉴스)**

- 중국 참고소식망은 올가을 중국과 러시아가 2018~2022년간 공동으로 달 연구 및 지구관측에 나서는 우주과학기술 협력 계획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타스통신을 인용해 6일 보도함.
- 양국은 또 러시아의 위치정보시스템(GPS)인 글로나스와 중국의 베이더우를 상호 연계 보완하는 한편 상대의 영토내에 지상 우주기지를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 일찍이 미국과 우주개발 경쟁을 벌였던 러시아는 그간 국제유가 변동과 서방제재 등으로 우주개발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우주 굴기에 나선 중국도 미국이 지난 2011년부터 미 중간 공동 과학기술 연구를 금지함에 따라 미국 등과의 우주과학 분야의 기술협력이 막혀있는 상태임.

2017. 8. 7.

■ **중·러 외교수장 “한반도 긴장 예방이 가장 중요”…대화에 무게(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별도로 회담하고 전날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등을 논의함.
- 왕 부장은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예방하고 ‘이중 동결’ 제안을 따르는 것, 그리고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 위한 ‘투트랙’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함.
- ‘이중 동결’이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동결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중국의 제안임.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8.5	러시아, 극동지역 전자비자 북한인 포함... 해외노동 차단 압박 역행(미국의소리)
	8.8	미 농무부 “북한정권 식량문제 해결의지 미약”(자유아시아방송)
	8.9	‘억류’ 31개월 만에 북한서 풀려난 한국계 임현수 목사(연합뉴스)
		국무부, 북한 억류 캐나다인 석방에 “북 여행 위험성 보여줘·미국인도 석방해야”(미국의소리)
	8.10	귀국길 임 목사 가족 “북한 주민을 잊지 말아야”(자유아시아방송)
		영국 위협분석 회사 “북한, 최악의 현대판 노예노동 국가”(자유아시아방송)
	8.11	카타르 “북한 노동자 고용 승인 중단”(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8.7	북 노동자 중동현장에서 철수 중(자유아시아방송)
	8.10	北 “南, 여종업원 12명 송환요구 거부 회책”(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8.8	김일성과도 만난적 있는 인권전문가 박경서 신임 한적 회장(연합뉴스)
	8.10	임현수 목사 석방됐지만...우리 국민 6명 北 억류(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8.7	이총리 “탈북자 3만명...이북5도청 업무 절대 안 줄어”(연합뉴스)
	8.9	“中, 체포 탈북민 석방해야...강제복송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연합뉴스)
	8.9	인권단체 “탈북자 강제송환은 살인 방조”(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8.5	영국 NGO 북한에 밀가루, 설탕 40t 지원(미국의소리)
	8.9	미주 한인 15년째 북한 어린이 지원(자유아시아방송)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8. 5.

■ 러시아, 극동지역 전자비자 북한인 포함...해외노동 차단 압박 역행(미국의소리)

- 미국이 북한 정권의 돈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북한 노동자를 받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 러시아는 이달부터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비자를 사실상 면제하는 전자비자 발급을 시작함.
-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4월 발표했던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18개 나라 국민들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이 이달부터 시작됐다고 발표함. 지난 1일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했고 8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자 입국사증을 통해 간편하게 블라디보스토크에 입국할 수 있음. 러시아 언론들은 새 조치가 사실상 비자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도함.
- 전자비자가 발급되는 18개 나라에는 북한과 인도, 이란, 일본이 포함돼 있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앞서 지난 4월 이 조치를 승인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북한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 관광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새 조치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2017. 8. 8.

■ 미 농무부 “북한정권 식량문제 해결의지 미약”(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농무부는 식량 부족 국가들 중 북한을 문제 해결 의지가 현저히 부족한 국가로 평가함. 농무부는 최근 공개한 ‘지구촌 식량 문제의 개선과 도전(Progress and Challenges in Global Food Security)’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이 부족한 국민 비율이 높은데도 곡물 수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함.
- 이 보고서는 지난달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가 작성한 ‘식량안보평가 2017’ 보고서의 후속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보고서는 북한 주민 두 명 중 한 명꼴로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지만 부족한 식량 규모에 비해 곡물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함. 식량부족 인구비율과 곡물 수입 규모를 분석한 좌표를 보면 북한은 조사 대상인 식량부족 76개국 중 가장 부정적인 자리를 차지함.
- 북한은 식량부족 인구 비율이 최악으로 좌표 상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아프리카

대륙의 스와질랜드 바로 직전에 있고 공급 가능한 식량 대비 수입 규모도 기준선 아래에 표시됨.

2017. 8. 9.

■ ‘억류’ 31개월 만에 북한서 풀려난 한국계 임현수 목사(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됐다가 9일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는 20여 년간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펼치던 캐나다 한인교회 목사로, 2015년 1월 방북 당시 갑자기 체포된 뒤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뒤 그동안 복역해 옴.
- 2015년 1월 북한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 나선시를 방문했던 임 목사는 그 다음 날 평양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되면서 연락이 끊어짐.
- 6개월 뒤인 2015년 7월 30일 임 목사는 북한 당국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 마련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내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행위를 감행한 것”이라며 북한을 드나들면서 종교국가를 세우려고 했다고 말함.
- 북한은 같은 해 12월 임 목사에게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중신노역형)을 선고함.

2017. 8. 10.

■ 국무부, 북한 억류 캐나다인 석방에 “북 여행 위험성 보여줘…미국인도 석방해야”(미국외소리)

-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해,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고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함.
-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씨가 2년 반 만에 석방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함.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6월 북한에서 억류 미국인들을 면담했으며, 미국은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해왔다는 설명임.
- 최 대변인은 임현수 씨 억류 사건은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강조해 준다면, 국무부는 어떤 북한 여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거듭 확인함.

- 최 대변인은 또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하거나 경유하는데 대한 여행 금지조치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승인한 것은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함.
-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일,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입국 금지 조치가 9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관보에 게재하고,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그 전에 떠나야 한다고 밝힘.

■ 귀국길 임 목사 가족 “북한 주민을 잊지 말아야”(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국가전복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31개월 만에 풀려나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에 가족과 그의 교회는 10일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 동안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함.
- 그의 석방을 위해 도와준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 장관, 그리고 뒤에서 협상에 임한 모든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잊지 않음. 북한에서 캐나다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토르켈 스티에른뢰프(Torkel Stiernlof) 평양주재 스웨덴 즉 스웨리예 대사와 직원들의 지지하지 않는 역할이 임 목사 석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별한 감사를 전함.
- 또한 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 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어 북한 주민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함.

■ 영국 위험분석 회사 “북한, 최악의 현대판 노예노동 국가”(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최악의 현대판 노예노동 국가로 지목됨.
- 위험분석 자문회사인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가 10일 ‘현대 노예제도 지수’(2017 Modern Slavery Index)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국가 중 북한을 최악의 노예노동국으로 발표함.
- 현대판 노예란 위협과 폭행, 강압, 사기 등의 이유로 인해 개인의 의지로 착취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임. 이들은 정부의 정책, 채무 계약 등의 형태로 묶인 채 고기잡이배나 유흥가, 공장 등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
- 이 회사가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방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처음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이 최악의 현대판 노예 노동국으로 지목된 것임.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대판

노예제도를 불법으로 다루지 않는 국가로, 인신매매와 노예노동, 강제결혼과 성 착취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2017. 8. 11.

■ 카타르 “북한 노동자 고용 승인 중단”(미국의소리)

- 중동의 카타르가 북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힘. 반면, 쿠웨이트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카타르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요청 승인을 중단했다고 밝힘. 카타르 정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 결의 2270호와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힘.
- 카타르 정부는 현재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허가 갱신도 중단했다고 밝힘. 아울러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대한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점진적으로 카타르를 떠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힘.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는 대북 결의 사상 최초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지적함.
- 2321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을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회원국들이 이런 관행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함.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AP 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쿠웨이트는 북한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적도 없다고 밝힘.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8. 7.

■ 북 노동자 중동현장에서 철수 중(자유아시아방송)

- 대북제재로 일거리를 얻지 못한 중동지역의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조금씩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동 걸프지역에 진출해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약 6천 명임.
- 하지만 현지 소식통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근래 들어 중동지역에서 조금씩 빠져 나가고 있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싼 임금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던 회사들이 각종 대북제재 눈치를 보면서 일거리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쿠웨이트의 경우 일거리를 얻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이, 입국할 때 받았던 비자를 갱신하지 못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근래 들어 늘었다고 소식통은 전함. 그 동안 중동지역 국가들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입원이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임.

2017. 8. 10.

■ **北 “南, 여종업원 12명 송환요구 거부 획책”(연합뉴스)**

- 북한은 10일 우리 정부가 작년 중국식당에서 탈출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송환요구 거부를 위해 일을 꾸몄다고 주장함.
-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강제 납치 피해자 구출 비상 대책 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4월 해외에서 집단 납치하여 끌고 간 12명의 우리 여성들을 강제결혼 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남조선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밝힘.
- 이어 이들 12명의 여종업원과 현재 복송을 요구하는 탈북여성 김련희 씨를 송환하지 않으면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어떤 인도주의 협력사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모략 책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 공민들을 하루빨리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8. 8.

■ **김일성과도 만남적 있는 인권전문가 박경서 신임 한적 회장(연합뉴스)**

- 대한적십자사 수장에 새로 선출된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유엔 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유엔 세계인권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해 대한민국 인권의 얼굴로 통함.
- 박 회장은 WCC 아시아국장 시절 28차례 등 그동안 총 29차례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1992년 1월 방북 당시에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기도 함.
- 박 회장은 한적 회장에 선출된 배경에 대해 “WCC 시절 오랫동안 국제적십자연맹과

- 함께 활동해 적십자 활동은 낮설지 않다”면서 “평소 생각했던 평화와 인권을 중심으로 선진국형 적십자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힘.
- 그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는 어느 경우에도 제1순위에 놓고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상대방 북한이 있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취임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김.
 - 이어 대북인도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1년 반 전에 북한에 출장을 다녀 왔다. 북한이 가난은 거의 해결했더라”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지원 분야를) 결정할 수 없고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와 만나서 상의해 볼 것”이라고 말함.

2017. 8. 10.

■ **임현수 목사 석방됐지만…우리 국민 6명 北 억류(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됐던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임현수 목사가 2년6개월여 만에 풀려나면서 여전히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위가 관심임.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옥 선교사는 3년 10개월째 억류 중임. 북한은 김 선교사에게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함. 각각 2014년 2월과 10월 체포된 최춘길·김국기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됨.
- 지난해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임.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음. 우리 정부는 당국 간 회담이나 대북 통지문 등을 통해 억류 국민 문제를 제기하고 석방 및 송환을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8. 7.

■ **이총리 “탈북자 3만명…이북5도청 업무 절대 안 줄어”(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탈북자가 벌써 3만명이다. 이북5도청의 업무는 절대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을 방문해 이북5도지사 및 중앙도민회장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밝힘.

- 이 총리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관계 개선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탈북동포가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본인들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기반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그분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 북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그러한 소식이 알려져 통일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탈북동포를 어떻게 대할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해야 할 과제” 라고 덧붙임.

2017. 8. 9.

■ **“中, 체포 탈북민 석방해야...강제북송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연합뉴스)**

-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윈난(雲南)성에서 체포된 북한이탈주민 15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함.
- 이들은 지난달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북한과 인접한 지린(吉林)성 투먼(圖門)시로 압송됐다는 소식에 가족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전함.
- 이들은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 규정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자 ‘살인방조’라고 주장함.
-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가족들로 이뤄졌다고 밝힌 한 단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을 가족이 애타게 기다리는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며 “불쌍한 탈북자들을 더는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함.

■ **인권단체 “탈북자 강제송환은 살인 방조”(자유아시아방송)**

- 남한의 북한 인권 단체들은 9일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림.
-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 ‘강제 북송 결사반대’, ‘우리 가족을 풀어 달라’는 글이 적힌 피켓, 즉 구호판을 든 사람들이 모임. 이들은 남한 내 북한 인권 단체 구성원들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중국 측에 전달하기 위해 9일 집회를 개최함.

-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지난 1일 주한 중국 대사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응답이 없어 규탄 시위를 하게 됐다”면서 “중국은 국제인권 규범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탈북자 강제 송환은 살인 방조”라고 꼬집기도 함.
-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 모인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물망초’, ‘나우’ 등 북한인권 단체원 20여 명은 집회 직후 탈북자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 전달함.

5. 대북지원

2017. 8. 5.

■ 영국 NGO 북한에 밀가루, 설탕 40t 지원(미국의소리)

- 영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밀가루와 설탕 등 40여t의 물자를 지원함.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지원하는 영국의 민간단체 ‘북녘 어린이 사랑’의 조지 리 대표는 4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방북해 빵 공장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밀가루와 설탕 40여t을 지원했다고 밝힘.
- 이 단체는 이번 방북 기간 평양과 사리원, 향산, 남포, 과일군 내 빵 공장과 유치원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짐.

■ 미주 한인 15년째 북한 어린이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뉴저지의 한 민간단체가 최근 탈북 어린이들과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밀가루와 종합비타민, 의약품 등을 지원함. 미화로 약 1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품은 미주 한인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됨.
- 뉴저지에 소재한 민간단체 ‘사랑의터키 한미재단’의 전상복 회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6월19일부터 7월28일까지 중국 연변에 있는 고아원과 탁아소를 지원하고 돌아왔다고 전함.
- 15년째 북한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전 회장은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 자제 조치로 인해서 올해는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 지원을 하지 못했다”며 “연변에 있는 고아원 뿐만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는 중국의 수송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말함.